

박지원 “북미정상회담 빠르면 3월...판문점·베트남 가능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북미 정상회담이 당장은 어렵지만 빠르면 3월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사잡담에 출연해 “북미의 쟁점인 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폐기 문제 및 트럼프가 자신의 대선 가도에 북핵문제 해결의 일정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장소 협의 및 조만간 발표 발언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친서 및 신년사 등을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는 서울에서, 김정은은 개성에서 출퇴근하는 관공리가 가장 상성도 있고 바람직하다”면서도 “판문점보다는 판문점과 개성에서 협상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트럼프는 개혁에 방목이 걸려있고 있는 베트남을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핵화를 실천하라고 하고 있고 김정은 역시 개혁 개방으로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베트남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이 강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날 방북 소식에 대해 박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협의를 하러 간 것”이라며 “지나해 세 차례 방북 전례 등을 볼 때 당면한 순서다. 중미 간 무역전쟁이 거의 타결돼 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대비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훈수도 듣고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예정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대해 “현재 내정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은 아주 우수한 정치인들이라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과도 가까운 분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대통령과도 가깝고 또 하면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쉽게 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책을 바꾸고 스타일도 바꿔야 하는 국면 전환,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인데 과연 전문 인사들만 중용하면 국민이 감동할까, 아량이 만족할까”라며 “이러한 부족함은 이후 내각 개편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文대통령, 코드인사 끝내야 지지율 하락으로 쫓길 것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 “집권 3년차, 전문가 써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대해 “지금 실적을 보여주는 실사구시 측면의 전문성 가진 사람, 실력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월드컬처오픈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까지는 ‘코드인사’라는 말을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 (집권) 3년차는 은공으로 인사하거나 인연으로 인사하거나, 보상 측면에서 인사하는 것은 끝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울곡이외의 용인술(用人術)을 언급하며 “창업할 때는 창업공신이 중요하다”면서도 “(창업) 다음 단계, 지금으로 말하면 3년차에는 수성(守城)이 중요하다. 레일을 깔았으니 달려야 할

때인데 (이때는) 전문가,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집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지지율 떨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지지율은 떨어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년차 들어서 거꾸로 인기가 오르는 건 아주 드물고 희귀한 사례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다시 만나면 ‘이걸로 쫓 거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지지율로 당선되지만 지지율로 일회일비하면 지지율 때문에 도로 내려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게 연연해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실기일진’을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 소위원회에서 장재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개혁위, 의원수 확대 ‘위헌’ 주장 논란...“300석 이상 안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8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개혁위 1소위원회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 이 한계는 정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봐야 할 문제”라며 “200인 이상이면 무한으로 늘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게 헌정 역사나 법 개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가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들어갔다고 본다”며 “하한선 규정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은 정책적, 압박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고위당직자는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늘리는 게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지역구를 줄이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정수 늘려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국민 동의를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종합해서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대표성, 비례성을 고민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에서 시대적 요구나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취지, 대표성과 비례성을 현재 인구구조나 조건 속에서 잘 실현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며 논의를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어떤 축어도 못 받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물었다.

심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고 지역구 숫자 축소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논의하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접근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민 1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위헌 쟁점이 정수 문제 연동형 방식 등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대표 선출 방식을 동등분할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어떤 안으로 합의하게 아니다”면서 “동등분할형으로 가지는 핵심은 농촌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고 도시의 인구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지는 안도 있다”며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경우 대안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중대선거구제로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안과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면 비례성을 높이지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복당 신청한 이용호 의원에 지역의원들 “절대 안돼”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결사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 순창 지역의원들

“몇개월 전까지 文 정부·민주당 저격수...철새 정치인 전형”

후 “지역민 민의·요구 따른 것...반대 기자회견 납득 어려워”

시도의원 30여명과 지역내 일부 당직자 등 80여명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결사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의회 윤지용 의장 등은 성

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복당 원서 제출은 일방적인 공지로 내용 또한 불투명한 허위사실이다. 이는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에게 고스란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이에 지역광역 및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은 이

의 전형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당원 등은 당 지도를 향해 “이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갈 길을 가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

체성을 고려해 복당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은 이용호 의원은 “오늘 일부 의원과 당직자의 의견을 이해하지만 지역주민의 생각과 과연 같은가 묻고 싶다”라고 말한 후 “유리돼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민주당 복당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늘 일부 의원 등의 반대 기자회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소속 1년 동안 민주당과 많은 교감이 있었던 만큼 입당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 전형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당원 등은 당 지도를 향해 “이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갈 길을 가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

체성을 고려해 복당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은 이용호 의원은 “오늘 일부 의원과 당직자의 의견을 이해하지만 지역주민의 생각과 과연 같은가 묻고 싶다”라고 말한 후 “유리돼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민주당 복당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늘 일부 의원 등의 반대 기자회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무소속 1년 동안 민주당과 많은 교감이 있었던 만큼 입당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소속 1년 동안 민주당과 많은 교감이 있었던 만큼 입당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Yaho' (야호) youth center. It featu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children playing and a large green 'YAO' logo. Text includes: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Contact info: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Logo: Together Gwangsan-gu.